

# 자부심 옛말... 베테랑 형사도 수사과 떠난다

### “더이상 미련 없다” 정기인사 앞두고 북부경찰 등 기피 현상 심화 수사권 조정 영향 업무 늘고 민원까지... ‘수사경과’ 자격 포기기도 광주 경찰관 수 늘었는데 수사 전문인력은 줄어 대책 마련 시급

#. 광주의 한 경찰서 수사과에서 10년 이상을 형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수사해온 수사관 A씨는 7~8월 중 정기 인사를 앞두고 “더이상 수사과에 미련이 없다. 지구대로 가겠다”는 뜻을 동료 경찰관들에게 밝혔다. A씨는 “재산범죄 전문 수사관으로 한때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은 쌓이고 위에서는 수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라고 하고 더는 버티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경정급 간부 B씨는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범죄 등 6대 범죄로 축소된 데 이어 올해 4월 검경 수사·기소 분리법안 시행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2대 범죄로 제한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며 “경찰 업무 부담은 최근 2년간 크게 늘었는데 수사 인력은 그대라. 이게 정상이냐”고 했다.

이르면 7월 중 단행될 경정급 이하 경찰관 정기 인사(전보)를 앞두고 광주지역 경찰서 수사관들의

‘탈(脫) 수사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관들의 수사과 이탈 현상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겨났지만 9월 시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단행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6일 광주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과에서만 10명 안팎의 수사관이 이번 정기 인사 때 수사과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북부서 수사과에는 60여명의 수사관이 근무하는데 수사과를 떠나겠다고 밝힌 이들은 대체로 경제팀 소속이다. 40명의 경제팀 소속 경찰관 가운데 10명 안팎이 여성청소년과와 교통과, 또는 지구대·파출소로 소속을 옮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5년 안팎 근무 경력이 쌓여 ‘수사과 허리’ 구실을 하는 수사관 뿐 아니라 10년 이상 재산범죄를 다룬 경찰관도 포함됐다고 한 경

찰은 전했다.

일정 수준의 시험을 통과한 수사 전문인력인 ‘수사 경과’ 보유자도 줄고 있다.

광주경찰청의 경우 2020년 1102명→2021년 1038명→2022년 7월 현재 937명으로 1년 반 사이 165명이 줄었다.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수는 2020년 3492명→2021년 3648명→ 2022년 현재 3695명 소폭이나마 늘었으나, 수사 전문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이다.

광주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인사를 앞두고 희망 보직을 적어내는 인사 내신서 제출 이전이라 정확한 규모는 집계가 어렵지만 적지 않은 수사 부서 직원들이 수사과를 떠나려 한다. 수가 경과 포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관들의 수사과 이탈 현상의 원인을 업무량 증가로 꼽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그에 따른 경찰 업무량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선 경찰관들은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재수사·보안 수사 요구권도 검찰에 있는데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얻은 게 뭐냐. 일선 경찰관 업무만 폭증했다. 그런데도 경찰관 정원은 큰 변화가 없다”며 “일감이 줄었는데 검사 수와 검찰

수사관 수는 변화가 없느냐”며 경찰 지휘부를 원망하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실제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광주지검에서 광주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한 사건은 2021년 30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 5월까지 124건이 접수됐다. 보안 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 해에만 2192건이 접수됐고, 올해 들어서 5월까지 983건이 접수됐다. 여기에 민원인들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도 급증 추세다. 지난해 640건(분기당 160건)이던 이의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서 1분기에만 236건이 접수됐다.

반면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사건당 처리 기간은 평균 38.4일이었으나 2021년은 42일로 나흘가량 늘었다. 경찰관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건 수도 2020년 7.4건이었으나 2021년은 9.5건으로 늘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인력 부족은 시민 불편으로 직결된다”면서 “수당지급, 승진 인사에서의 배려 등 미봉책 말고 업무가 늘어난 만큼 수사 부서 정원을 늘리는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요트업체 대표 2심서 감형

잠수 자격증도 없는 현장 실습 고교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켰다가 사망 사고를 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 계류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고(故) 홍정운 군(사망 당시 17세)에게 요트 바닥 따개비(갑각류) 제거를 위한 잠수를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교육이나 안전조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잠수 작업을 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온 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 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

### “밀실 지휘 없애려는 게 신설 조직의 목적 15~20명 규모... 13만 경찰장악 어불성설”

#### 경찰국 신설 당위성 강조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침을 확정된 데 대한 경찰의 집단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호남지역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6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 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임응환 광주경찰청장 등 광주경찰청 지휘부와 광주경찰청·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등 일선 경찰관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선 “신설 경찰국 조직은 15~20명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규모를 가지고 13만명이나 되는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경되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랐던 영도청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여대 정부

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찰 인사 등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의 당위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경찰과 해경, 심지어 군 참모총장 인사까지 쥐락펴락했던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이런 음성적이고 밀실에서 이뤄지는 지휘·통제를 없애려는 게 경찰 업무조직 신설의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따라서 동요할 필요도 없다. 기존과 같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여, 지금껏 잘해왔듯이 앞으로는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대해 노조 격인 경찰청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은 경찰 통제 라며 반발이 일자 이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 지구대에 이어 지난 5일 세종 남부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일선 경찰관과의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취지 설명과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6일 오후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토론회장에서 광주지역 경찰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또 산재 사망사고... 설비점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숨져

광주·전남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오후 3시40분께 광산구 하남동 하남산업단지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설비점검을 하던 노동자 A(39)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프레스 기계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을 멈춘 채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기계가 멈춘 것을 발견한 외국인 노동자가 다시 작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사고당시 20여m 떨어져 곳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외국인 노동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 50분께 고흥에서는 6m높이의 전신주에서 전기배선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안전벨트가 끊어져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투자자 모심

1. 자금 - 5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주식회사 오 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H. 010-3605-5000